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8/ 31 통권 1586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계의 전쟁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장기임대주택)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중소기업의 건강보험료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사례를 제공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임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장기임대주택)
-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각종소득의 과세기준 계산·공제금액과 원천징수세율>

소득구분	소득의 대응원가, 소득공제 계산 등	원천징수세율, 종합소득합산
정규근로소득	소액급여의 70%부터, 일반 15% 내외	기본누진세율(6%-45%), 종합합산
일용근로소득	(하루 일당 - 15만원) × 6%	세율 6%, 55% 세액공제, 분리과세
독립사업소득	실제소요비용, 기준경비 · 단순경비율	원천세율 3%, 순소득의 종합합산
기타소득	재산권 총수입 - 법정경비 60%	원천세율 20%, 순소득(총수입의 40%)의 종합합산
종교인소득	2천까지 80%, 4천까지 50%, 6천까지 30%, 6천만원 초과시 20%	높은 소득공제후 기본누진세율
퇴직소득	표준환산급여의 100%-35% 적용(평균 50%)	약 50% 소득에 기본누진세율 적용, 별도과세
국민연금소득	최소 350~최대 900만원 공제	기본누진세율 적용, 종합합산
일반이자소득	대응원가 공제금액 없음	원천세 14%, 종합합산
비영업이자	대응원가 공제금액 없음	원천세 25%, 종합합산
일반배당소득	대응원가없음, 배당 11% 가산	원천세 14%, 종합합산, 세액공제 11%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86호 / 주간 35호

2022. 8. 31.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각종소득의 과세기준계산 공제금액과 원천징수세율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중소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액요인들과 대응책 요약	2
C E O 에 세 이	금입없이 계속되는 세계의 전쟁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단주치의 세무조정 - 감가상각 내용년수문의 및 토지임대료산정방법 - 부외자산 회계처리 - 상품 재고 대여 관련 문의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임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주민세(사업소분) 세액 및 세율 -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9 10
직 장 인 Survival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임 (서면법령부가-5469, 2021.12.29) -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 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 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법안-45, 2022.03.11)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 26일까지 지급... 2조8000억원 규모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12
세 무 정 보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장기임대주택)	15
회 계 정 보	-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29
노 무 정 보	-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42 44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3

# 중소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액요인들과 대응책 요약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1. 피부양자 소득기준강화 : 연간소득 3,400만원 → 2,000만원이하로 건보료 부담증가(피부양자에서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합산소득 2,000만원 판단방법 : 금융·사업·근로·공적연금·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사업자등록과 주민번호 등 원천징수분)
2. 공적연금소득도 포함계산 판단 : 연소득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상실 : 지역가입자로 별도 부과  
연금소득인정비율도 30% → 50%로 상향(연금연액 2천만원당 건보료 11만원 : 1.5배 상승효과)
3. 사업자등록증 있고, 약간의 사업소득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상실
4. 3.3% 원천징수사업소득자는 연 500만원 이상시 상실
5. ① 피부양자 재산기준 강화 : 과세표준 5.4억원 → 3.6억원 이하로 지역가입자 확대  
② 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자 전환기준  
㉠ 재산과세표준 9억원 초과 하거나  
㉡ 연간합산소득 1천만원 초과 + 재산과세표준 3.6억원 초과하는 부모인 경우도 모두 피부양자에서 상실됨.  
③ 재산의 과세표준은 실제 시가의 약 60%로 반영
6. 중소기업 대표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상실, 지역가입자 전환문제에 대해, 모든 소득과 재산상황을 파악, 판단해야 함(각 중소기업 경영자가 스스로 보험공단과 직접 연락·계산과정 협의·금액결정 해야 함).

#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계의 전쟁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중국 관영매체인 화구시보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5월6일 한국국가정보원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이버방위센터(CDCOE)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의 해설위원으로 활동중인 전 환구시보편집인인 후시진(胡錫進)은 “한국이 이웃국가들에 적대적으로 대하는 길을 택한다면 이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세계통상으로 일어난 한국의 무역거래액 1위 국가인 중국과의 혐오거래는 적극 극복과제다. 더구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처지에 러·우크라이나전쟁으로 자원이 빈곤한 한국에서는 원유와 곡물 또 다양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 따른 금리인상 등은 ‘경제태풍’이란 위기 속에 빠진 현실이다.

2차대전후 겨우 탄생한 대한민국의 눈으로 보면 세계전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우선 한국이 탄생 직후 1950년 6월25일 터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어렵사리 미·북 휴전에 돌입했다. 베트남전쟁(1960.6-1975.4)은 북베트남과 대립한 남베트남을 지원한 미국이 패전한 전쟁이다. 한국도 참여해서 수많은 한국청년들의 사상자들이 생겨났다. 패배한 남베트남 지도부의 무능과 부패는 미국을 낮 뜨겁게 했다.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중심부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911항공기테러사건’이 터져 세상이 깜짝 놀랐다.

아프카니스탄 전쟁(2001.10-2021.8.)은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한 탈레반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종전 후 미국이 적극 후원한 부패덩어리 아프카니스탄 대통령이 수많은 돈을 날리면서 비행기로 도주한 풍경이 또 미국을 낮 뜨겁게 했다.

이제 러·우전쟁 중에 우방을 동원하면서 미국의 바이든대통령은 최근 330억달러 지원을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 3월 의회가 승인한 136억달러의 두배가 넘고 러시아 국방예산 (659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2차대전후 거의 끊임없이 미국은 세계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해 오면서 그 많은

돈과 사람 생명을 잃어왔다. 왜 그럴까?

2차대전의 달인, 영웅출신으로 미국 제34대 대통령에 오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대통령 (1953.1~1961.1)의 고별연설에서 전쟁에 필요한 전투기, 무기, 전함 등을 공급하는 ‘군산복합체’ (MIC)라는 권력조직에 대한 경고가 매우 의미심장했다.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독특한 현상이다. 제2차대전중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르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L3해리스 등 6대 방위산업체는 전쟁기간에 연방정부와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큰 이익을 얻어왔다. 싱크탱크와 미디어도 모두 그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복합체의 본부가 되어 있다.

2020년 11월말 미국의 진보적 매체인 ‘자코뱅’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당선인의 국가안보팀이 군산복합체의 대변인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장관지명자인 토니 블링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인 레이크 설리번,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등은 오바마정부시절 이력을 활용해 군수업체자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싱크탱크 등에서 일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동시에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왔다고 한다. 그들 모두 현직에서 활약 중이다.

## 단주차익 세무조정

**Q** 단주발생으로 단주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과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어떤 거래에 의해 단주가 발생되었는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는데, 매매거래에 따른 처분이익이라면 소득 및 익금에 반영되지만 매매거래가 아닌 평가손익에 해당한다면 소득 및 익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 내용년수문의 및 토지임대료산정방법

**Q** (질문1) 주유소 지하탱크용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알고싶습니다  
취득가액 2억~3억 가량이고 구축물로 해야하는 건지 아님 저장탱크로 내용년수 4년으로 하는건지?

(질문2) 토지의 적정 임대료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유소임대에 줄때 임대료 산정방법?

**A** 1. 일반적으로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이외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축물로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도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토지의 시가의 50%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 부외자산 회계처리

**Q** 당사의 거래중 파지 처리를 외주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 비용에 관련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가상각기간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파지처리 장비 소유가 당사로 이전되면서 부외 자산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외 자산에 대한 세무적처리와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A** 중고자산이 귀사의 소유로 이전되는 경우 다른 일반 자산 취득과 마찬가지로 시가로 장부에 반영하면 됩니다.

### 상품 재고 대여 관련 문의

**Q** 상품 재고 대여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A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B, C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A사에서 물량을 맞추지 못해 입고가 지연되었고,  
이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B사에 2020년 매출했던 재고를 대여하여 C사에 매출하였습니  
다. (21년 4월)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재고 입고)를 하지 않고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재고 출고)만 하여,  
해당 상품은 재고가 마이너스 나는 상황입니다.  
B사로부터 대여한 상품은 추후 A사에서 입고가 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1. 대여, 반납 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대여 : 상품 / 외상매입금  
반납 : 외상매입금 / 상품  
2. 대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대여, 반납시 상품/차입금(외상매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반납시 반대분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택을 운영하고 있는바, 사택의 운영에 따른 회사의 세무상 처리방법과 또한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처분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 사택제공은 부당행위 적용되지 않으며, 임직원들도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됨

회사가 임직원에게 금전 등의 자산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 또는 요율로 대여하는 경우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현행 세법은 시가와 차액에 대해 회사는 익금산입 반영하고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에는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해도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하고 있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요율 등으로 제공하더라도 해당 차액을 익금산입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도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의 이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반영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하지만 사택의 이용대가인 임차료 이외에 사택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적인 비용인 가스료·수도요금·전기료 등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가스료·수도요금 등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즉, 사택이용대가에 한해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지, 사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적인 비용까지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법인46012-3960(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회사가 사택대신 지원해주는 주택 임차보증금도 비과세에 해당됨

기재부는 회사가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택 대여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례(2004두7993, 2006.5.11)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사택제공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하였다.

즉, 사택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같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므로 부당지원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미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종업원에게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지원하는 임차금 등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근로소득으로 반영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주민세(사업소분) 세액 및 세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자본금 (출자금액)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기본 세율	50,000	12,500원	50억 초과	200,000원	50,000원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25,000원
			30억 이하 기타법인	50,000원	12,500원

연면적 세율 ※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 : 연면적(㎡) × 250원  
(단,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 : 연면적(㎡) × 500원)

※ 개인사업자 기본세액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2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증여관련 규정

구분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취득 후 양도시 이월과세기준	5년간 이월	10년간 이월
증여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공시가격	시가인정액 (감정 · 공매 · 유사매매 사례가 중 최근가액)



##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과 실효세율

	직계비속 명목 최고세율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혜택	실제 부담 최고세율
스페인	34%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1.7%
벨기에	30%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3.0%
아일랜드	33%	주식가치의 90% 공제	3.3%
네덜란드	20%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107만유로 초과)~ 100%(107만유로 이하)공제	3.4%
독일	30%	지분 및 임금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4.5%
프랑스	45%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11.25%
영국	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20.0%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요

투자기간	만기 10년 · 20년
가산금리	만기 보유 시 기본 이자에 30% 수준의 가산금리 적용
세제혜택	14% 분리과세
투자한도	인당 연간 1억원씩 총 2억원(2023~2024년)



##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1. 경영마인드로 무장하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는 것만큼 일한다는 안일한 자세로 생활하면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오너의 마음을 알고 오너의 자세를 직장다닐때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직장은 돈을 받으며 경영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2. 전략적 마인드를 갖춰라  
점선면 전략을 가져라. 일을 하면서 어느 한부분에 거점을 확보하고 다음에 다른 것을 해서 선으로 잇고, 다음에는 면을 구축하라.
3. 자기 상품을 진단하라  
나의 상품을 항상 진단하라. 고객이 나의 상품을 찾지 않을때가 가장 두려운 것이다.
4.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자기 머리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을 상대로 해보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내 상품과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5. 시장과 고객을 읽어라  
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6.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라  
내가 아동출판물 시장에 뛰어든 것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더 큰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7. 시장친화적인 인물로 변신하라  
앞으로 세상은 점점 세일즈, 마케팅, 비즈니스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세일즈 개념을 재미있게 받아들이라. 비즈니스 넘버1원을 추구하라.
8. 목표를 신념화하라  
목표를 정했으면 이미 달성된 것처럼 생각해보고 말해보라.  
목표가 단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넘어  
분명한 현실로 느낄 수 있도록 잠재의식속에 신념화시켜라.

# 최 신 판 례 예 규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구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구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임

서면법령부가-5469, 2021.12.29

## Marketing Tax consulting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사전법령재산-333, 2021.12.31

### ■ 질 의

-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사업에서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구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조건으로 재발급 가능한지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구역의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 신탁재산(사업장), 수익자 중 누구인지

### ■ 회 신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인 경우로서

1. 분양대행업자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구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신탁구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 질 의

-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질의

-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 회 신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자본거래-911, 2022.03.08

#### ■ 질 의

- 민원인은 000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로 AAA공사의 협의 매수에 따라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함
  - 이후,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인 BBB부동산투자회사(이하 'BBB')에 현물출자 후 주식을 받음
  - 'BBB'의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 후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
-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

#### ■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법인-45, 2022.03.11

####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임금인상액을 2020년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26일까지 지급… 2조8000억원 규모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2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원래 법정지급 기한은 9월 말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높아진 저소득층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으로 2021년 소득분 관련한 지급이다. 지난해까지는 반기정산분을 합쳐서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난 6월에 이미 반기정산분을 지급했기에 5월 정기신청분만 지급된다. 지급자 수는 290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모든 정기 신청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알려주는 한편,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저자산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 합산 자산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일 경우 지원받는다.

단, 전세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8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에 한해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지만, 장려금은 10% 감액된다.

### 법에 묶인 지방세 감면… 지자체 조례로 풀다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금감면 운영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대상자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줬다고 한다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경우 사업 유형에 맞춰 별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지방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를 위해 산 주택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도입해 추정 배제사유를 줄였다.

### 관세청, 추석 맞아 '24시간 통관' 가동…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이 추석을 맞아 24시간 통관 및 관세환급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특별지원대책 시행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5일 추석명절 연휴 기간을 맞아 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 화물 적기선적 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29일부터 12일까지 15일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될 것을 대비해 인천과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 (장기임대주택)

- 국세청, 2022. 7

- 
- (발간배경)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구성내용)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① 사실관계 ② 질의내용 ③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참고자료 순으로
    - ▷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 [www.nts.go.kr](http://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 ▷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1 발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이에,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습니다.

## 2 주요 구성내용

-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민들이 양도소득세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 국민들이 자주 묻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② 다주택자 중과제도 ③ 조합원입주권·분양권 ④ 장기임대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월 제작하며,
  -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 구성은 ①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질의내용 ③ 국세청의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비과세 판정흐름도 등 참고자료 순으로 하여
  -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흐름도를 추가하고
  - ▶ 안내한 사례와 동일·유사한 상황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함께 수록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 3 이용방법

-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의 별도 코너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며, 접근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4 향후계획

-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 ▷ 지난해 주택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주택과 세금(’21년 3월)」 책자를 발간하고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21년 6월)」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 올해에도 이러한 납세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 ▷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주택과 세금」책자는 개정세법을 반영하는 등 더욱 알차고 새롭게 구성하여 「2022 주택과 세금」으로 3월 중 다시 발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 김국세씨가 거주하던 A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22.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김국세씨는 '22.6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Q. 4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의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 B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분양권 등이 없었으므로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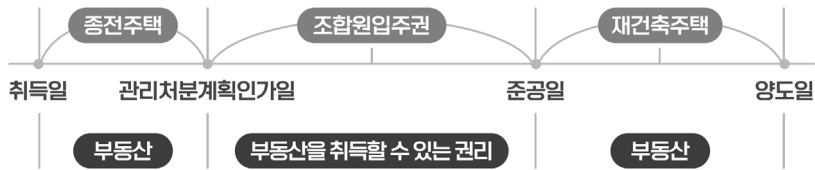
\*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소득법 §8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1재건축사업 또는 2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3자율주택정비사업, 4가로주택정비사업, 5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6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

##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요건 (소득법 §89조(4))

-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을 것
  -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 2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 박대환씨가 거주하던 A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22.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박대환씨는 '22.6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Q. 3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 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 귀하의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 B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 조합원입주권 변경시기

구 분	'03.6.30. 이전	'03.7.1.~'05.5.30.	'05.5.31. 이후
재건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일('18.2.9. 이후)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2.1.1.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 해석사례 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2019.09.0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22.1.1. 전 취득분에 한함

### 해석사례 2. 서면-2019-부동산-0737(2019.10.31.)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3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 ◎ 이민국씨가 10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21.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 이민국씨는 '22.6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 양도시 적용된다던데,  
-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A.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10년 이상 보유·거주 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입니다.
- \*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 1 40%(10년 이상 보유) + 240%(10년 이상 거주) = 80%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법 §95②)

#### ① 토지·건물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상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 ②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구 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공제율	보유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 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03.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최성실씨가 4년 이상 거주하던 A주택은 '22.5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개(1+1)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됨

- 최성실씨는 '22.6월 조합원입주권 2개(1+1)를 동시에 양도함

Q. 4년 이상 살던 주택이 ' 22.5월 재개발사업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 22.6월 입주권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습니다.

- 입주권 2개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1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같은 날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 납세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2개 중 나중에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석사례 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2016.02.23.)

◎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해석사례 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2017.10.20.)

◎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 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4호나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일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2개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5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강민음씨는 이사 목적 등으로 '21.7월 B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함

- 강민음씨는 '23.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 저처럼 이사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안 되나요?

A. 귀하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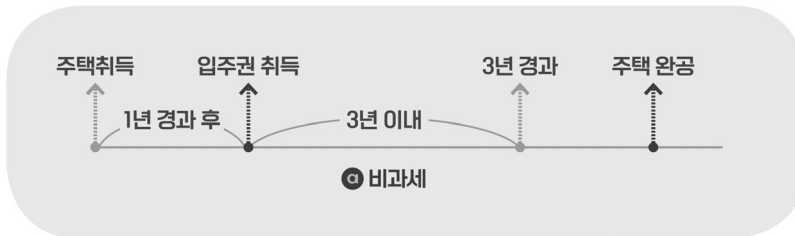
-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A주택 양도시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소득령 §156의2ㄱ)

-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③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소득령 §156의2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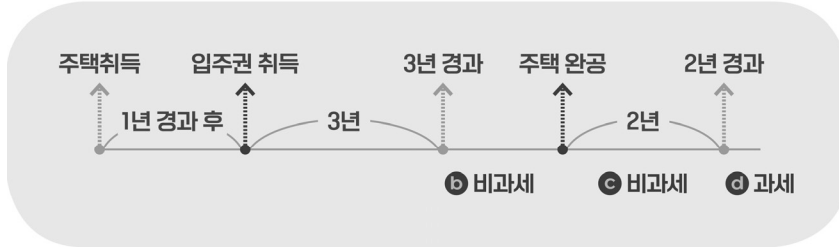
-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 ②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③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④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 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포함)



## 6

###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 ㉠ 윤진절씨는 A주택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20.2월 B주택을 취득함  
- 윤진절씨는 '24.7월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재개발사업 중 거주하던 B주택을 A' 주택 완공 후 양도하려고 합니다.

- 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 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양도해야 되며,  
또 다른 요건은 있나요?

A. 귀하의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B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A'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A'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소득령 §156의2.)

- 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함)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③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2020.12.16.)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해당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6조의2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7

###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아버지와 합가한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 ◎ 1주택자인 권세정씨는 '22.2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

- 권세정씨는 '24.12월 A주택 또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예정임

Q. 아버지와 합가하여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A. 1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합가를 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 B조합원입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B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예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만, B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B'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1066(2011.12.21.)

●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분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0623(2011.07.20.)

●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하고 부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8

##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최민국씨는 '21.3월 B분양권을 취득함

- 최민국씨는 '24.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 A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1.1.1. 이후 분양권 취득분부터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소득령 §156의3깁)**

-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 ②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 ③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분양권 취득 후 3년 지나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소득령 §156의3자)**

-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 ②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 ③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 ④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할 것



◎ 위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는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9

##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A주택을 소유한 김국세씨는 '22.1월 B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함

- 김국세씨는 '22.7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A주택과 B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17.8.2. 이전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 요건은 없음

#### 해석사례 1. 서면-2021-법규재산-0586(2022.01.27.)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해석사례 2. 서면-2021-법규재산-5635(2022.02.2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0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김대한씨는 '21.1월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함

- 김대한씨는 '23.2월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예정임

Q. ' 21.6.1. 이후부터 「주택」 분양권의 경우 「상가」 분양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A.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주택」 분양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2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 21.6.1. 이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시 세율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주택 분양권*	70%	60%	
주택 분양권 외	50%	40%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



###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01.14.)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입니다.

### 해석사례 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2021.09.30.)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인 경우 「소득세법」 제88조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21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2. 8

## 〈 주요 내용 〉

- (분석 결과) 상장법인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新외감법 시행('19회계연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
  - \*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572사로, 지난해와 유사하게 영업환경 불확실성, 전기 재무제표 수정내역을 다수 기재
  - \* 영업환경 불확실성 : '19년 42사 → '20년 402사 → '21년 375사
  - 전기재무제표 수정 : '19년 24사 → '20년 107사 → '21년 81사
-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나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92사로,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
  - \* 계속기업 불확실성 : '19년 84사 → '20년 105사 → '21년 92사
  - 자산규모별(92사) : 1천억 미만(59사), 1천억~5천억(28사), 5천억~2조(4사), 2조 이상(1사)
- (시사점) 회계개혁\*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비적정의견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정부분 불식된 것으로 평가
  - \*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검토→감사) 등
- 상장법인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 충실화 필요
-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의 경우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 계속기업 불확실성 미기재 기업보다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이 6배 높음



## I

## 개요

- (분석대상) 상장법인 2,428\*사의 '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20회계연도(이하 '전기') 대비 64사 증가

\* '22.3월말 주권상장법인 2,502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4사 제외

- 분석대상 중 코스닥 상장법인이 1,508사(62.1%)로 가장 많고, 12월 결산(98.4%) 연결재무제표(76.8%) 작성 기업이 다수를 차지

## II

## 분석결과

## 1

## 감사의견 현황

◆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新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15회계연도(99.4%) 이후 계속 하락하였으나, 시행('19회계연도) 이후에는 큰 폭의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19년 97.2%→'20년 97.0%→'21년 97.2%)

- (적정의견 : 2,360사)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2%(2,360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97.0%) 대비 소폭 상승(+0.2%p)

- 新외감법 시행('19년) 이후 큰 폭의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 전기 대비 증감율(%p) : '17년  $\Delta 0.5$  → '18년  $\Delta 0.4$  → '19년  $\Delta 0.9$  → '20년  $\Delta 0.2$  → '21년 +0.2

- (비적정의견 : 68사) 회계법인 33사가 상장법인 68사에 대해 비적정의견(한정 10사 + 의견거절 58사)을 표명하여 전기(71사) 대비 3사 감소

- 한정적정의견은 10사\*로 전기(6사) 대비 4사 증가하였고, 의견거절은 58사로 전기(65사) 대비 7사 감소

\* 감사범위제한 7사, 계속기업 불확실성 2사, 회계기준위반 1사

- － 의견거절은 '17년부터 '20년까지 증가('17년 25사 → '20년 65사) 추세였으나, '21회계연도에는 전기 대비 소폭 감소( $\Delta 7$ 사)

-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56사), 계속기업 불확실성(31사), 회계기준 위반(1사) 順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비율 및 비적정의견 기업 수 추이〉

(단위 : 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정 (비율)	2,123 (98.5)	2,187 (98.1)	2,236 (97.2)	2,293 (97.0)	2,360 (97.2)
비적정	32	43	65	71	68
한정	7	8	7	6	10
의견거절	25	35	58	65	58
합 계	2,155	2,230	2,301	2,364	2,428

- (시장별 분포) 유가증권 · 코스닥 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코넥스 시장은 전기 대비 크게 하락(92.1% → 87.5%, △4.6%p)

\* 유가증권 : '20년 98.7% → '21년 99.1%(+0.4%p), 코스닥 : '20년 96.5% → '21년 97.0%(+0.5%p)

〈시장 유형별 외부감사의견 현황〉

(단위 : 사, %, %p)

구 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증감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적정 (비율)	768 (98.7)	1,397 (96.5)	128 (92.1)	2,293	97.0	785 (99.1)	1,463 (97.0)	112 (87.5)	2,360	97.2	67	0.2
비적정	10	50	11	71	3.0	7	45	16	68*	2.8	△3	△0.2
한정	2	4	-	6	0.3	2	7	1	10	0.4	4	0.1
의견거절	8	46	11	65	2.7	5	38	15	58	2.4	△7	△0.3
합 계	778	1,447	139	2,364	100.0	792	1,508	128	2,428	100.0	64	-

\* 2개연도 연속 비적정의견 등으로 상장폐지 결정된 회사는 모두 19사(코스닥 14사, 코넥스 5사)

- (감사수임 유형별 분포)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5.2%)은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 비율(98.7%)보다 3.5%p 낮은 수준

\* 주기적지정 기업과 직권지정 기업으로 구분

- 주기적지정 : 상장법인의 연속 6개년 감사인 자유선임 이후 3년동안 감사인을 지정
- 직권지정 : 관리종목, 감리조치,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공정감사 필요 회사는 감사인을 지정

- 지정기업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적정의견 비율이 자유수임기업보다 낮으나, 그 차이\*는 '19회계연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 \* 적정의견 비율차이[(자유 - 지정), %p] : '19년 15.1 → '20년 6.2 → '21년 3.5
- 직권지정 기업(적정 92.2%)에 비해 재무상황이 좋아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주기적지정 기업(적정 99.3%)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
- \* 전체 지정기업 중 주기적지정('20년에 첫 시행) 비중 : '20년 28.9% → '21년 41.8%(+12.9%p)

####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 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유수입	회사 수	1,984	1,998	2,160	1,597	1,397
	적정의견 비율(a)	99.0	99.1	98.1	99.0	98.7
지정	회사 수	171	232	141	767	1,031
	적정의견 비율(b)	92.4	89.2	83.0	92.8	95.2
차이 (a)-(b)		6.6	9.9	15.1	6.2	3.5

- (자산규모별 분포)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으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3.5%로 가장 낮음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

#### 〈2021 회계연도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 사, %)

구 분	1천억원 미만		1천억 ~5천억원		5천억 ~2조원		2조원 이상		합 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적정	855	93.5	1,020	99.2	295	99.7	190	100	2,360	97.2
한정	8	0.9	2	0.2	-	-	-	-	10	0.4
의견 거절	51	5.6	6	0.6	1	0.3	-	-	58	2.4
합 계	914	100	1,028	100	296	100	190	100	2,428	100

## 2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 (강조사항\*)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572사로 전기(630사) 대비 감소(△58사)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지난해와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불확실성을 다양한 업종\*에서 강조사항으로 기재(341사)
  - \* 제조업(177사), 금융 및 보험업(34사), 서비스업(33사), 도·소매업(30사) 등
-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는 지난해 주기적지정제, 감사인등록제 첫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증가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83사)하였으나, 당기에는 감사인 변경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26사)
  - \* 감사인 변경 기업 수 : '19년 611사 → '20년 1,021사(+410사) → '21년 621사(△400사)
  -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 : '19년 24사 → '20년 107사(+83사) → '21년 81사(△26사)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문단에 기재된 주요 내용〉

(단위 : 건, 사)

항목별 구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증 감
소송 등 영업환경의 중대한 불확실성	402	375	△27
코로나 19 영향	369	341	△28
회계 변경	132	99	△33
전기 재무제표 수정	107	81	△26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121	105	△16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81	78	△3
기타(신규상장, 관리종목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72	85	13
강조사항 합계	808	742	△66
기재기업 수	630	572	△58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2,360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92사로 전기(105사) 대비 감소\*(△13사)
- \* '17년 84사 → '18년 85사 → '19년 84사 → '20년 105사 → '21년 92사
    - 자산규모별(92사) : 1천억 미만(59사), 1천억~5천억(28사), 5천억~2조(4사), 2조 이상(1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적정의견)이 이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13.3%로 미기재기업(2.1%)보다 약 6배 높음
    - \* 전기('20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 105사 중 14사[상장폐지 3사, 비적정의견('21년) 11사]



## 3 감사인 분포

- ◆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으로 4대 회계법인(Big4)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20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당기에는 소폭 증가로 전환
-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 비중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감소

□ (Big4 집중도) Big4\*는 상장법인 2,428사 중 792사(32.6%)를 감사하였으며, 그 비중은 전기(31.0%) 대비 소폭 증가(+1.6%p)

\*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규모, 총감사회사 수 등 규모기준 상위 4개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 지난해까지 Big4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당기에는 Big4로 지정된 회사 비중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로 전환

\* 상장법인의 Big4 감사인 선임 비중 : 지정 - '20년 25.8% → '21년 30.6%(+4.8%p)  
자유수입 - '20년 33.6% → '21년 34.1%(+0.5%p)

〈최근 5년간 Big4의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와 감사비중〉

(단위 : 사, %, %p)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Big4	963	953	879	734	792
분석대상전체	2,155	2,230	2,301	2,364	2,428
Big4 비중(증감)	44.7	42.7(△2.0)	38.2(△4.5)	31.0(△7.2)	32.6(+1.6)

○ 한편 중견 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31.2%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11.3%p)하였으나, 올해는 감소\*(△4.8%p)

\* 중견 회계법인 감사대상회사 수 비중 : '19년 24.7% → '20년 36.0%(+11.3%p) → '21년 31.2%(△4.8%p)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회계법인 감사비중〉

(단위 : 사, %, %p)

구 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증감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Big4 (비중)	437 (56.2)	283 (19.6)	14 (10.1)	734	31.0	444 (56.1)	329 (21.8)	19 (14.8)	792	32.6	58	1.6
중견 회계법인 (비중)	185 (23.8)	610 (42.2)	57 (41.0)	852	36.0	167 (21.0)	546 (36.2)	45 (35.2)	758	31.2	△94	△4.8
기타 회계법인	156	554	68	778	33.0	181	633	64	878	36.2	100	3.2
합 계	778	1,447	139	2,364		792	1,508	128	2,428			

- (시가총액 비중)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21.12말 시가총액은 2,553조원으로 전기(2,278조원) 대비 275조원(12.1%) 증가하였으며,
- Big4가 감사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2,171조원(85.0%)으로, 그 비중은 전기(84.9%)와 비슷한 수준
  - － 시가총액 기준 Big4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Big4의 감사품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큼

〈최근 5년간 Big4가 감사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및 비중〉

(단위 : 조원, %, %p)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Big4	1,644	1,409	1,447	1,934	2,171
분석대상 전체	1,842	1,600	1,649	2,278	2,553
Big4 비중 (증감)	89.2	88.1 (△1.1)	87.8 (△0.3)	84.9 (△2.9)	85.0 (0.1)

- (자산규모 비중) Big4가 감사한 자산 2조원 이상 및 5천억~2조원 미만 대형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94.2% 및 62.5%인 반면
- 자산 1천억~5천억원 및 1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26.4% 및 17.2%에 불과
  - －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선호경향은 지난해 심화(+8.0%p)되었으나, 올해는 소폭 둔화\*(△1.6%p)

\*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4 비중 : '19년 : 71.6% → '20년 : 79.6%(+8.0%p) → '21년 : 78.0%(△1.6%p)

〈회계법인의 자산규모별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와 감사비중〉

(단위 : 사, %)

구 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Big4		Non-Big4		합 계		Big4		Non-Big4		합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조원 이상	162	94.7	9	5.3	171	100.0	179	94.2	11	5.8	190	100.0
5천억~2조원	179	66.3	91	33.7	270	100.0	185	62.5	111	37.5	296	100.0
1천억~5천억원	263	26.8	719	73.2	982	100.0	271	26.4	757	73.6	1,028	100.0
1천억원 미만	130	13.8	811	86.2	941	100.0	157	17.2	757	82.8	914	100.0
합 계	734		1,630		2,364		792		1,636		2,428	



## III

## 시사점

## ① 최근 3년동안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일정수준을 유지

- 적정의견 비율은 新외감법 개정 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3개년동안은 큰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 적정의견 비율 : '16년 99.0% → '17년 98.5% → '18년 98.1% →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회계개혁\*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비적정의견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정부분 불식된 것으로 평가

\*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검토→감사) 등

⇒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과도한 부담요인은 개선하는 등 회계개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 금융위는 8월 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를 시작할 예정

## ② 감사보고서의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사항에 유의 필요

-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다수\*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회사 수 : '19년 84사 → '20년 105사 → '21년 92사

- 자산규모별(92사) : 1천억 미만(59사), 1천억~5천억(28사), 5천억~2조(4사), 2조 이상(1사)

-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손실흐수능력이 취약하여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 미기재 기업보다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이 6배 높음

## ③ 재무제표 수정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지속

- '21회계연도에도 다수의 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영업환경 불확실성, 전기재무제표 수정 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

\* 강조사항 기재회사 수 : '19년 250사 → '20년 630사 → '21년 572사

- 영업환경 불확실성 : '19년 42사 → '20년 402사 → '21년 375사

전기재무제표 수정 : '19년 24사 → '20년 107사 → '21년 81사

- 회사는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 관련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운영 충실화 필요

⇒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정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한 엄정 조치 예정

#### 4 중견 회계법인\*으로의 쏠림현상은 일부 완화

\* 회계법인 Top10 중 하위 6사

○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 비중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감소\*

\* 중견 회계법인 감사대상회사 수 비중 : '19년 24.7% → '20년 36.0%(+11.3%p) → '21년 31.2%(△4.8%p)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Non-Big4 회계법인 선호 경향도 지난해 심화되었으나, 올해는 소폭 둔화\*

\*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4 비중 : '19년 : 71.6% → '20년 : 79.6%(+8.0%p) → '21년 : 78.0%(△1.6%p)

⇒ 최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 유도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 중이며, 향후에도 건전한 감사품질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감독과 알맞은 지원을 병행할 예정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22.7.18. 보도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 붙임1 감사보고서의 개요

### 1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회사·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함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기한
회사	정기주주총회 1주 전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면,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新외감법 §23)

### 2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 가. 감사의견



- (종류)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구 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input type="checkbox"/> 감사범위 제한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2)		○3)
<input type="checkbox"/>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2)	○3)	
<input type="checkbox"/> 계속기업 가정 •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부적절하게 공시 • 타당하지 않음	○1)	○2)	○3) ○4)	

주 :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감사기준서 570 문단 22)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감사기준서 705 문단 7,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감사기준서 705 문단 8~9,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사기준서 570 문단 21)

- ①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 ② (한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 ③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하는 의견
- ④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 나. 강조사항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여,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

\* (예) 회계변경, 중요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대한 불확실성(소송 등) 등

#### 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 ☐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고 계속기업 가정이 유효한 경우 기업은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이 있을 때 기업은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별도단락에 기재

#### 라. 핵심감사사항

- ☐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 붙임2

### 참고 통계자료

#### 1

#### 분석대상 상장법인

#### 가. 시장별 분포

(단위 : 사)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가증권	758	769	775	778	792
코스닥	1,249	1,311	1,379	1,447	1,508
코넥스	148	150	147	139	128
합 계	2,155	2,230	2,301	2,364	2,428



## 나. 결산월별 분포

(단위 : 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2월	2,116	2,191	2,260	2,323	2,388
(비율)	(98.2)	(98.3)	(98.2)	(98.3)	(98.4)
3월	19	20	20	19	19
6월	12	11	13	14	12
기타	8	8	8	8	9
합 계	2,155	2,230	2,301	2,364	2,428

##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단위 : 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결	1,610	1,684	1,758	1,820	1,864
(비율)	(74.7)	(75.5)	(76.4)	(77.0)	(76.8)
개별	545	546	543	544	564
합 계	2,155	2,230	2,301	2,364	2,428

## 2 감사의견

### 가. 감사의견 현황

(단위 : 사)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정	2,123	2,187	2,236	2,293	2,360
한정	7	8	7	6	10
부적정	-	-	-	-	-
의견거절	25	35	58	65	58
합 계	2,155	2,230	2,301	2,364	2,428

### 나. 시장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 사)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유가증권	754	4	763	6	768	7	768	10	785	7
코스닥	1,228	21	1,280	31	1,330	49	1,397	50	1,463	45

코넥스	141	7	144	6	138	9	128	11	112	16
합 계	2,123	32	2,187	43	2,236	65	2,293	71	2,360	68

다. 감사수임 유형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 사)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자유수임	1,965	19	1,980	18	2,119	41	1,581	16	1,379	18
감사인지정	158	13	207	25	117	24	712	55	981	50
합 계	2,123	32	2,187	43	2,236	65	2,293	71	2,360	68

라. 자산규모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 사)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2조원 이상	200	-	209	1	168	-	171	-	190	-
5천억 ~ 2조원	297	2	307	-	246	-	268	2	295	1
1천억 ~ 5천억원	819	11	874	16	943	12	970	12	1,020	8
1천억원 미만	807	19	797	26	879	53	884	57	855	59
합 계	2,123	32	2,187	43	2,236	65	2,293	71	2,360	68

#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고용노동부, 2022. 8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 △ (월 환산액 병기) 6.9.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 △ (업종별 구분) 6.16.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 △ (최저임금 수준) 6.29.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 가결

  -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익위원 권고('22.6.21.):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요청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19일 (금)	8월 22일 (월)	8월 23일 (화)	8월 24일 (수)	8월 25일 (목)
미 달 러 (USD)	1317.30	1326.70	1338.20	1341.80	1341.40
일 본 엔 (JPY)	969.71	968.75	973.34	981.82	978.09
영 국 파 운 드 (GBP)	1571.87	1568.42	1574.79	1588.15	1581.44
캐 나 다 달 러 (CAD)	1017.42	1020.85	1025.64	1035.74	1034.15
홍 콩 달 러 (HKD)	167.93	169.10	170.55	171.00	170.97
위 안 화 (CNH)	193.81	194.51	195.57	195.32	195.27
유 로 화 (EUR)	1328.76	1331.48	1330.30	1338.18	1336.84
호 주 달 러 (AUD)	910.72	912.24	921.02	929.80	926.57
싱 가 폴 달 러 (SGD)	950.47	953.09	957.64	963.66	962.1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4.43	296.37	298.37	298.94	299.05

#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국세청, 2022. 7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21.8.17. 개정, '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 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22.6.2. )
    - (개정전) 폭염·한파 시 그늘막 등 임시휴게시설 설치비에만 사용가능
    - (개정후) 휴게시설 설치 및 온도, 조명 기준 준수를 위한 비용도 사용가능
-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



- 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라고 하면서
-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붙임**

**휴게시설 관련 법령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의 범위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8.18.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 고용노동부, 2022. 8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목)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 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화)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목)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 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현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 → (개선) 모든 소상공인
- (지원기간) 신청일부터 최대 5년
- (지원예산) ('21) 25.6억원 → ('22) 36.3억원
- (지원내용)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 지원(당해 예산 소진시까지)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50	17,550	12,870	14,040	15,210

-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http://www.sbiz.or.kr))

□ 연도별 지원 실적(단위: 개사)

- ('18) 2,489 → ('19) 5,547 → ('20) 10,145 → ('21) 14,679